K-에너지 대전환… 켄텍 정상화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가 전폭적 지원 시급"

출연금 복원·전문성 갖춘 총장 선임 등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상화해 케이(K)-에너지 대전환의 백년지대계로 거듭나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RE100과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약속한 만큼, 켄텍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켄텍은 지난 2022년 특별법에 따라 나주에 개교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다. 개교 이후 빠르게 학사 체계를 갖추고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명문대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총장 해임 압박,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켄텍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특히 당초 약속했던 연 2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2025년 100억원으로 줄었으며, 이는 과학기술원들과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이라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이어 켄텍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 삭감의 즉각적인 복원과 미래 에너지 R&D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총장의 조속한 선임, 두 가지 핵심 현안의 조기 해결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2023년 12월 초대 총장 사임 이후, 대학의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인사를 총장 후보에 포함시켰던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시도는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 소통능력을 갖춘 인사가 새 총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과 인재는 에너지 대전환 성공의 핵심이고, 켄텍은 그 중심에 있다"며 "학문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과 젊은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켄텍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지급

대통령실, 19일 추경안 상정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 예산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해당 사업은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도 담긴 사업이다.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의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되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 30만원, 일반 국민에 15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에 이른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지원'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5000억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담배 제조사,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전남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강위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정 현안 해결 역할 기대

전남도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사진)이 17일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취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영광 출신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고향인 영광 묘량면에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결성해 10여 년 동안 운영하며 농촌 교육과 문화, 복지의 융합을 통해 전국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기업 1호인 '할매손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설립해, 지역 주민과 함께 모싯잎을 키우고 떡도 만들었다.

또 묘량면의 유일한 가게가 문을 닫자 마을기업 2호인 '동락점빵'을 만들어 1t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42개 마을을 순회하며 공급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지역 주민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2014년 전남 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재임 시에는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설립해 노인이 직접 북카페를 운영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팥죽 가게와 두부가게를 열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도 하는 우수 복지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재임 시에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히자 계약재배 피해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를 시행해 매회 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남인재개발원 등에서 1천 회 이상 강연을 하고 다양한 정책커뮤니테이션에 참여하는 등의 경력을 두루 갖췄다.

전남도는 강 부지사의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살려 새 정부와 국회 등의 가교역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 전남도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고 홍남순 가옥, 민주화 교육공간 변신

시, 10월 13일 개관 목표

4가지 스토리라인 구성

동구, 오월여행 코스 검토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공사 모습.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주도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살았던 가옥이 민주·인권·평화가 담긴 민주화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0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5·18 사적지 제29호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광주 동구 궁동 15번지)은 이달 말 외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 5일 나라장터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토지 135㎡, 건물 99㎡에 홍 변호사의 당시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 공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홍남순 변호사와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구속자 석방 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했던 곳이다.

시는 가옥에 홍남순 변호사를 상징할 수 있는 간판 제작·설치, 리플릿, 포스터 등과 함께 생전 인터뷰 등을 선보인다. 특히 실내 공간에는 홍 변호사의 5·18 이전(삶으로 새긴 정의, 정의의 외길)과 이후(인권의 서사, 공감과 기억)의 스토리라인을 4가지로 나눠 구성한다.

우선 '삶으로 새긴 정의'에는 홍 변호사의 생애를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주요 사건으로 구분해 연대별로 전시된다.

'정의의 외길'은 5·18민주화운동 이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주요 시국사건을 중심으로 평등과 정의를 위한 민주·인권 변호사 활동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방침이다.

'인권의 서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지켜내기 위해 의인들과 함께했던 투쟁 내용을 선보인다.

'공감과 기억'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홍 변호사의 뜻을 생각하는 모두의 민주사랑방 메시지월을 조성하며, 정의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기억하는 참여형 전시로 만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의의 외길, 인권의 서사를 주제로 객관적이면서 서정적 내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 연출을 기획했다"며 "개관 예정일인 10월13일에 맞춰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와 공사 상황을 공유 중이다"고 말했다.

동구도 이에 발맞춰 오월 기억여행과 인문산책길 탐방 프로그램의 코스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홍남순 변호사는 1912년 7월 20일 전남 능주군(현재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나 195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60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판사가 되기 전부터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판사직을 그만둔 뒤 1963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와 투쟁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민주화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하다가 2006년 10월14일 사망했으며, 국립5·18민주묘지 제5묘역 76번에 안장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1면 '강 시장 TF회의'서 계속

시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부(가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공지능(AI)산업혁신진흥원 설립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숨가쁘게 달리고 있어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골목경제 상황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미래를 위한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날개를 펴고 광주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직무대행 황학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지부장 이두식
광양시산림조합 조합장 송백섭
광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순구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돈성
MG광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재숙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장한채